

잠녀·문화 세계화 내부 공론화 추진 관심

도 일방통행식 작업 추진에 어촌계·잠수회 등 목소리 모으기로
도의회 행자위 '해녀문화센터' 제동…콘텐츠 구성 등 고민 주문

등록 : 2012년 05월 01일 (화) 22:22:17 | 승인 : 2012년 05월 01일 (화) 22:26:12
최종수정 : 2012년 05월 01일 (화) 22:22:54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 물질하는 잠녀들<제민일보 자료사진>

잠녀·잠녀문화 세계화를 위해 도내 어촌계·잠수회가 머리를 맞대기로 해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진행하고 있는 작업들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실상 그 배경에 도의 일방적 움직임에 대한 의심과 뜻미더움이 깔려있는 등 원만한 사업 운용을 위한 처방이 주문되고 있다.

공론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제주시어촌계장협의회(회장 임백연·이하 협의회)다. 제주잠녀문화 세계화와 관련한 일련의 움직임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역 잠녀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전·현직 어촌계장과 잠수회장 등을 포함한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워킹그룹'이 단 한 차례 운영을 끝으로 유야무야된 이후 의견을 전달할 창구가 없어졌다 는 점 역시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제주장녀·문화 세계화'를 중심으로 상실 위기에 놓인 제주장녀·장녀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면서 정작 장녀들에게 문화 정체성이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의견을 묻는 형식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또 '도민의 요구'라는 전제 아래 외부에 공개되는 내용 대부분이 이전 진행 중인 사업의 유지 또는 확대 아니면 '해녀문화센터' 건립과 같은 외형 갖추기에 치우친 점 역시 사회를 설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달 열린 제293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중 '해녀문화센터 신축' 심사를 보류하는 등 도의 일방통행식 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 행자위는 "시설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 채울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다음 심사까지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등 어촌계와 잠수회의 불편함을 일부 반영했다.

임백연 시어촌계장협의회장은 "장녀문화 세계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표점까지 함께 가자는 것"이라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통 알 방법이 없어 소통 창구를 직접 만들기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